

# ILO 가입 따른 국내 관련서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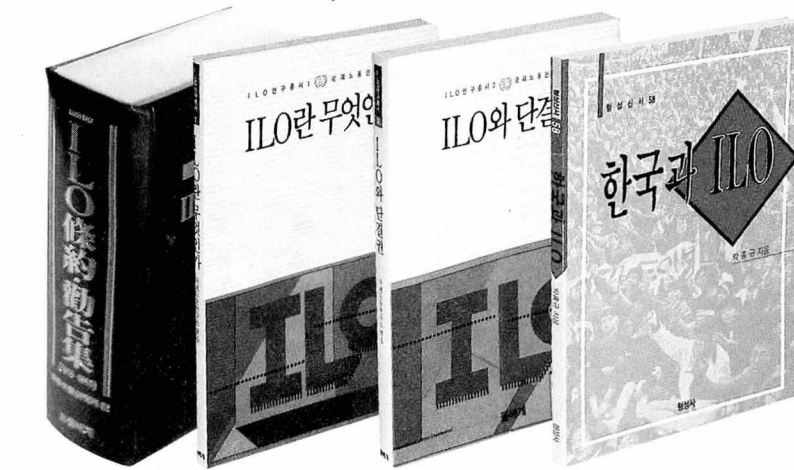
「ILO연구총서」 및 「한국과 ILO」 등 총 4종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 정식회원국이 됨으로써 현장정신과 비준 조약 이행 등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 ILO가입은 유엔 회원국가의 단순한 형식절차 이전에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이므로 노동관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의 발판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ILO에 관한 국내 지식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현재까지 출간된 ILO관련서적이 총 4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하며, 그런 점에서 이들 책은 충분히 눈길을 끌게 한다.

국제노동연구소(소장 피정선)에서 외국의 노사관계, 국제노동단체 등의 현황개를 위해 시리즈로 엮는 'ILO연구총서'는 현재 3권으로 출간, 비교적 체계적으로 ILO의 공식자료를 제공한다. 그 첫권인 「ILO란 무엇인가」(둘베개)는 1919년 설립돼 정부·노동자·사용자가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의 ILO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설명한다. ILO의 설립배경과 결사의 자유 및 노·사·정 3자주의의 기본원칙과 성격을 설명하고, 각 국가의 비준으로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강제조항이 없는 '권고'에 의해 이뤄지는 국제노동기준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ILO와 단결권」(둘베개)은 현재 노동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현실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에 대해 ILO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를 집중조명하고 있다.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라는 보편적 기본권에서 비롯된 권리라고 보면, ILO에서 가장 중시하여 결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단결권의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 책은 단결권을 어떻게 ILO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게 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살피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87호, 1948년)과 이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98호, 1949년)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ILO조약·권고집」(둘베개)은 ILO의 보다 정확한 내용과약을 위한 방대한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망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단결권과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제시

한 172개 조약과 179개의 권고 내용을 모두 완역해 수록했으며 ILO헌장과 총회 의사규칙 등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도 부록으로 실고 있어 객관적인 1차자료로 유용할 만하다.

이러한 ILO기준은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법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간략한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한다. 앞의 책들이 주로 ILO 자체의 기준과 조약권고를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면 「한국과 ILO」(박홍규 지음, 형성사)는 ILO의 공식 법규설명보다는 한국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한국노동법과의 넓고도 깊은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시시키고 있다. ILO의 기본원칙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데 저자는 특히 인권적 차원에서 제정된 87호와 98호 조약 등 노동단체권에 관한 조약이 주목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비준거부사를 표시하는 등 한국상황의 적용에 있어 낙관적이지 못한 현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ILO 조약의 내용을 분류하고, 한국법과 관련지어 노동의 권리와 노동조건·노동단체의 권리, 특수노동과 여성노동의 보호, 사회보장의 권리, 3자구성주의와 노동행정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한다. 예컨대 ILO는 주40시간제 조약을 채택하고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권고하지만, 한국에서는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주44시간제로 단축됐으나 종전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강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간단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 결국 이 책은 한국의 현행 노동법이 여러 측면에서 ILO조약의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주시시키면서 한국노동운동의 지속적인 인내를 촉구하고 있다.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 ILO에 관한 내용소개는 이제 우리나라가 회원당사국이 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게 됐다. 좀더 다양한 형태의 ILO 관련서적 출간이 시급한 현실과제에 남는 것은 ILO 기준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상식화 일반화할 때 노동운동의 새 차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지원 기자

# 사회사의 핵심주제 다룬 학술서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6권



사회사와 사회사상사 및 역사사회학의 연구 활동을 꾸준히 체계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사연구회가 그동안의 학술연구 결과를 6권의 논문집으로 묶어 펴냈다. 이번에 묶인 논문들은 주로 사회사의 핵심주제인 사회조직의 원리와 그 변화과정을 근현대 한국사회에 초점을 두고 비교사적 인식과 포괄적인 체계이론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의 차이를 구명, 근대사회의 이행성격을 밝히는 다양한 주제의 한 갈래로 묶인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27집)에는 역사문헌을 통해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입증한 연구(신용하)를 비롯해

조선전기 서얼신분의 고찰이나 향리층 연구동향 검토, 농민집강소를 통해 본 갑오농민전쟁의 사회적 지향 등을 논한다. 「한국근현대의 사회조직과 변동」(28집)은 일제하에서 현대까지의 사회조직 문제에 주목한다. 지역사회의 거시적 변동의 측면에서 일제하 전남지방의 면업구조 형성을 분석하거나 1930년대의 면방기업 노동과정, 함경지역 농민투쟁을 조명한 논문들을 실었다. 특히 일제 때부터 현대까지 특수한 임금노동자 형태인 머슴제도의 변모과정 분석과 탄광업에서의 덕대제 변화과정을 비교고찰한 논문은 흥미롭다.

이 두권이 주로 종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데 반해 도시발달과 노동문제의 의식을 심화시킨 「한국의 도시문제와 지역사회」(29집)는 횡적 접근으로 현대 도시서민의 주거실태와 도시노점상의 계급성을 파헤치면서 지역사회의 구조변동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동운동」(30집)은 노동과정과

노동시장 등 노동자의 구체적 실상을 일제하와 현대의 두시기로 집약해 검토하고 있다. 일본인 독점기업 속에서의 노동자 상태는 어떠했는가를 밝히고 현대의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효과,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특성 등이 다각적으로 논의돼 있다.

한편 거시적으로 이론의 틀을 살펴본 「사회사연구와 사회이론」(31집)은 마르크스의 과학적 방법의 핵심원리와 베버의 인식론 등 고전이론가의 사회이론을 재조명하는가 하면, 알튀세르의 인식론적 지향과 프랑수아제의 망탈리테사적 접근을 검토한 논문 등을 실어 그것이 한국사회사연구에 어떻게 인용되는가를 제시해 보인다. 끝으로 「일본의 근현대사회사」(32집)는 역사적으로 밀접하지만 놀라운 경제성장, 패권주의적 움직임으로 다시금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일본의 사회사를 3시기로 나눠 조명해 눈길을 끈다.

문학과학지성사 / 216~340면 / 4300~6700원